

“쌀값 폭락, 농심도 폭락”... 화난 도내 농민들, 논 갈아엎었다

“목숨값과 다름없는 쌀값 보장하라”

“정말 가슴이 아프지만 이렇게라도 의지를 보여야겠습니다.”

20일 오전 10시 익산시 춘포면의 한 논. 아직 벼가 노랑게 익어 수확할 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트랙터 3대가 논 위에 시동이 걸린 채 대기 중이다.

이후 트랙터는 일제히 소리를 내며 논 위를 지나갔다. 트랙터가 지나간 자리엔 누워 있는 아직 파릇한 벼들이 남았다.

이 논을 둘러싼 300여명의 농민들은 그저 가만히 트랙터가 논을 뚫고 버리는 모습과 쓰러진 채 숨이 죽은 벼들을 바라보기만 했다.

벼 수확철을 한 달여 정도 남겼지만 논 주인인 조용진(42)씨는 갈수록 떨어지는 쌀값에 결국 직접 트랙터를 타고 논을 갈아엎기로 결심했다.



20일 익산시 춘포면의 한 논 위에서 논을 갈아엎고 있는 트랙터를 한 농민이 지켜보고 있다. 이날 전북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등은 “정부는 쌀값 폭락을 막아야 한다”며 집회를 열었다.

전농 전북연맹, 익산시 논 갈아엎기 투쟁 쌀값, 지난해 10월 대비 약 18%나 폭락

조씨는 “정성을 기울여 길러온 소중한 벼를 갈아엎으니 눈물을 감출 수가 없는 마음”이라며 “우리 농민들의 강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으니 청년 농업인으로서 의지를 보여줘야겠다는 마음에 논을 갈아엎었다”고 말했다.

조씨가 갈아엎은 논 면적은 약 1.100평(3,600여㎡). 조씨에 따르면 이 논에서 난 쌀을 모두 판다면 약 4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바라며 이 수익을 포기한 것이다.

그는 “계속된 쌀값 폭락과 다른 농산물 가격 역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

고 ‘이건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다”며 “우리의 이러한 심정을 정부가 하루빨리 알아채고 꼭 정책에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전북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및 농민 300여명은 이곳 일대에서 ‘전북도연맹 논갈아엎기 투쟁’ 집회를 열고 “정부는 농민들의 목숨과 마찬가지로 쌀값의 폭락을 막아

야 한다”고 외쳤다.

전농 전북도연맹 등은 “지난 2022년, 45년 만에 가장 쌀값이 폭락했을 때 우리는 절규했고 2년이 지난 지금 또 쌀값은 계속해서 아래로 곤두박질치고 있다”며 “정부 통계로는 (쌀 한 가마니에) 18만원을 주장하지만 가격이 워낙 낮아지고 있는 지금 실질적인 거래 자체가 되고 있

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같은 쌀값 폭락의 큰 원인은 농민에게 있는 것이 아닌 수입 쌀을 들어오는 개방정책이 원인”이라며 “폭락에 대해 계속해서 수수방관으로 대응한다면 결국 우리들은 투쟁으로 농민의 목숨값인 쌀값을 쟁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5일 기준 쌀 한 가마니(80kg)의 가격은 21만752원이었으나 지난 5일엔 17만8476원을 기록, 약 18%의 감소율을 보였다. /뉴시스



드론테러 대응 훈련 참가 군 장병들 격려 2024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20일 무주 양수발전소에서 ‘무주양수발전소 드론 테러 대응 합동훈련’이 실시된 가운데, 김관영 전북별자치도지사가 훈련에 참가한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코로나19 백신 755만명분 확보”

질병청장 “10월부터 고위험군 대상 접종 시행”

정부가 4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755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다. 10월부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월부터 2024~2025절기 코로나19 접종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몇 명을 접종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라는 백종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은 취지로 답했다.

지 청장은 “지금 (코로나19 백신) 755만명분을 확보했고 고위험군 약 633만명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에 소요된 예산은 4290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10월 중 독감 백신과 같이 동시 접종으로 시행해서 접종률을 높이고자 한다”고 했다.

백 의원이 폐기되는 백신이 많다고

지적하자 지 청장은 “폐기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해 왔다”며 “앞으로도 잘 관리해서 수급 상황을 잘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억1679만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도입했으며 이 중 28.8%에 달하는 6197만회분이 폐기됐다. 유효기간 경과가 6160만회분, 접종 종료에 따른 미활용 29만회분, 백신 온도 이탈 및 용기 파손 등이 각각 4만회분으로 파악됐다.

현재 300개인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대상 의료기관 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적극 공감한다”고 답했다. 지 청장은 “기관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며 “2025년도 9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적극 도와 달라”고 부연했다. /뉴시스

여야, 전세사기특별법 합의... 보증금 최대 7억까지

28일 국회 본회의서 최종 처리... 임차료 지급·전세임대 정부안에 사각지대 해소 '방점'

여야가 20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에 합의했다.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뜻을 모은 첫 민생법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9건을 논의해 위원회 대안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감정가 차익을 돌려주고 공공임대를 장기 제공하는 방식의 정부안을 뼈대로 한다. 공급 대상은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우선으로 하며 경매 차익을 임차료로 지급해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경매 차익이 남지 않거나 공공임대 주택에 사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LH가 전세임대를 통해 피해자가 원하는 곳에 살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피해 세입자에게 보증금 30% 일시 지원 등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임차료 지급과 전세임대 방안을 받아들여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의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여기에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최종 7억원 구간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소위 야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경매 차익을 활용한 전세사기 구제 방식의 정부·여당안은 형평성, 현실성 측면에서 의문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법안 처리가) 1년 넘은 상황에서 민주당안을 고수하는 것이 자칫 (대통령) 거부권 절차로 피해자 구제를 지연할 수 있다고 판단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피해자 고통이 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어떻게 만든 수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돼 다행”이라며 “야당이 제기한 사각지대 해소와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요구 등을 계속해서 반영하고 보완해 합의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6개월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21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뉴시스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도내 14개 시군 확대 환영”

권요안 전북자치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안주2·더불어민주당)이 전북자치도가 내년도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을 도내 14개 시·군으로 확대·실시하기로 했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은 도내 인구소멸 대상 시·군의 청년농에게 스마트팜 기반조성, 온실신축, ICT기재 설치를 비롯해 청년농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기술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부터 지방소멸기금과 시·군비로 개소당 4.4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 15개소 68억, 2023년 20개소 88억, 2024년 14개소 61.6억원을 도내 인구감소지역 11개 시군의 청년



농업인에게 지원해 왔다.

이처럼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은 지방소멸기금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어, 도내 14개 시·군 중 전주 시, 군산시, 완주군 등 3개 시·군의 청년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그동안 권 의원은 업무보고와 간담회를 통해 “도내 14개 시·군의 청년농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전북자치도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11개 시·군은 소멸기금으로,

그 외 전주, 군산시, 완주군은 균등 이상 사업비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각 시군 사업설명회를 실시한 후 공모를 통해 오는 10월 중 사업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권요안 의원은 “농촌지역 인구 감소, 고령화로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청년농업인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자치도가 도내 14개 시군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한 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도내 많은 청년 농업인이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안도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자결길

시즌 II
명화다라클래식선책

2024. 8. 22 ~ 11. 29

문화공간 이음 ART SPACE

티켓 | 전석 22,000원

예약 | "명화다라클래식 선책 II" 검색

문의 | 카카오톡 채널 "문화공간이음" ☎ 063. 223. 5323

주최·주관 |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전주매일신문

후원 | KT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전주매일신문

문의 | 카카오톡 채널 "문화공간이음" ☎ 063. 223. 5323

본 공연은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2024년 소공연장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입니다